

# 김상조 “위장전입, 부인 항암치료 때문”

(강남 은마아파트)

### “처가 수술 병원 강남에 있어” “자기표절논문, 노사정위 승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는 지난 2일 강남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부인의 항암치료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온 후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다. 대장암 2기말이고, 일년간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수술받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게 중요한 이유였다”며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소명이 될 텐데 불행히 보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은마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위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노사정위원회 보고서와 산업노동 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내용이 동일해 자

기표절 논란이 제기 된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노사정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0년에 쓴 글이라 지금 윤리규정에 비춰보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노동연구라는 학술지에 계신 분들이 제게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달라고 요청해 게재됐다”며 “제가 기고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가 퇴직 후 그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수 받는 것을 특별로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일정이

간 이후 연구용역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이 게재할 때 검토도 안하고 원고를 주나. 어디까지 실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할 것 아니냐”는 이진복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관해 소출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2008년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이다. 이후에는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구비 700만원을 받고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항후 금융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방안’과 같은해 12월 ‘산업노동 연구’에 게재한 논문이 동일해 자기표절 논란이 제기됐다. /뉴스

## 문제인 대통령, 치매 가족 간담회 가져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요양업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이어가고 있는 ‘찾아가는 대통령’ 일환의 세 번째 행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났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치매 가족 간담회를 마련한 것은 공약사안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는 점을 강조해 왔다. 간담회는 치매 가족을 두고 있는 배우 박철민씨와 오랫동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김미화씨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치매 환자를 두고 있는 가족의 어려움과 관련업무 종사자들 사연에 공감하고 위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노원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만났던 환자 가족도 다시 참석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 /뉴스

## 진안군 - 민주당 전북도당 대선공약 이행 정책간담회

진안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일 대선공약 국책사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진안군에서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박명석 군의장과 군의원, 김현철 도의원이 참석하고, 민주당에서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및 안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진안군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마이산 氣품은 명품산후조리센터 조성, ▲진안고원 명품홍삼집적화 단지 조성,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주민생활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지난 제18대 대선공약사업이었으나 갑자기 공립화로 변경돼 사업비 및 운영을 진안군에서 부담할 수 없어 보류된 사업으로 그동안 군민의 실망감이 컸으나 19대 대선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 군민의 산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립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항로 군수는 지난 5월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통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면서 전북 지원의지를 표명한 만큼 진안군은 물론 전국이 고무 절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지역 현안과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이행되도록 진안군과 더불어 당정 간 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진안군 발전을 위해 힘닿는 대로 노력하겠다”며 “진안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일 대선공약 국책사업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 정부, 中 한국 유치원생 참사 '방화' 결론에 '충격'

정부는 2일 중국 당국이 산둥성에서 11명의 한국·중국 유치원생이 사망한 통학버스 화재참사의 원인이 '고의적 방화'라고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급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다수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위에서에서 지난달 9일 산둥성 웨이하이 시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망사건(한국인 유치원생 10명 등 총 13명 사망)에 대해 “통 버스가 앞차와 충돌로 정차한 뒤 운전기사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량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웨이하이 참사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59분(한국시간 9시59분)께 웨이하이시 환추이(環翠)구 타오자광 터널 안에서 중세(中世) 한국국제학교 병설 유치원의 통학차량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불길에 휩싸이면서 참변을 빚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정부는 중국측이 정례차차, 보상 및 유족지원 등 합당한 사후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며, 중국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외교부는 주청다도총영사관을 통해 유가족과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서 향후 정례차차 및 불법지원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 홍익표 “사드 보고 누락, 김관진 주축 '독사파 배후'”

문제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홍익표 기획분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배후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주축인 군 내 사조직 '독사파'를 지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전 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을 갔다 왔다. 그래서 독일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독사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운을 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다. 실제로 보고 누락은 김관진 씨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이를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와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5월21일부터 그만뒀고 26일 보고이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김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민군 국방장관이 아니라 김 전 실장이 핵심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뉴스

# 도내 공무원, ‘지방분권’ 정책 대응력 높인다

## 전북도,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강화’ 주제 지방분권 전문가 특강 진행

전북도는 지난 2일, 도와 시·군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헌법개정과 지방분권 강화’를 주제로 지방분권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새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지방분권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남궁 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법제실장,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등 입법과 예산정책 주

요 부서를 두루 거친 입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강은 전문가가 바라보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지면서 열띤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번 특강은 지난 4월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데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공

민 대상 지방분권 교육으로, 시·군의 자치분권 담당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도 오락팀 기획관은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일선에서 실현하는 지방 공무원의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교육, 전문가 특강 및 토론회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